

與野, 공수처 갈등 지속 청문회 가시밭길 예고

국민의힘 '원내-법제사위 간담회' 김 후보자 12억 전세, 보유주식 등 공수처장·법무장관 후보 전략논의 "공수처, 이미 6개월 전 출범했어야" 민주당 '신속 인사청문회' 예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권 갈등으로 인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인사청문회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야당에서 공수처 출범부터 공수처장 후보 선정 등 과정에 문제를 삼으면서다.

국민의힘은 5일 '원내-법제사법위원회 간담회'를 갖고 김진욱 공수처장·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직접적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낙마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김 후보자가 거주 중인 12억 5000만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전세, 1억원 상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진단 키트 제조업체 주식 보유 등은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등도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야당의 거부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야당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들의 공수처장 후보 의결과 추천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본안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공수처장 후보 의결과 추천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김 후보자의 자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없게 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법원의 공수처장 후보 의결 및 추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은 오는 7일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신속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4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요청안에 대해 재

기한 뒤 국회로 송부한 만큼 빠르게 인사청문 절차까지 마칠 것이라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이달 중 공수처 정식 출범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김태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이미 6개월 전에 출범했어야 했다"며 "하루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과 만나 신속하게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공수처 설치와 관련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을 두고 "시간 끌기와 꼼수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을 수는 없다"며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국민은 청렴한 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위해 국회가 개혁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반대를 마치고 대안을 갖고 인사청문회에 임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섰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준비단도 같은 날 출범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이마빌딩 내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한 가운데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소처럼 꾸준히 앞으로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7월부터 산재 적용

고용부, 약 6.6만여명 적용 예상

소프트웨어사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약 6만6000명이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는 지속 확대돼 왔다.

2008년 7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도사, 레미콘기사 등을 시작으로 2012년 5월엔 택배기사, 쿠팡서비스기사가 포함됐으며 2016년 7월부터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가, 2019년 1월부터엔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27개 전체 건설기계 조종사 종사자로 확대됐다. 지난해 7월부터는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도 포함됐다.

이번에 신규 추가된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는 장시간 근무 등으로 뇌심혈관 질환, 손목터널 증후군, 경추·요추 디스크, 스트레스성 정신장애 등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의사가 높음에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도 의결돼, 올해 1월만료 예정이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의 유효기간이 2023년 1월 31일로 2년간 연장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코로나 조기극복… 잃어버린 일상 찾을 것”

文 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 “경제 맥박 더 힘차게 뛰도록 할 것 위기를 기회로… 선도국가로 도약”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새해에는 우리 경제의 맥박이 더욱 힘차게 뛰도록 하겠다. 코로나 이전 수준을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세종청사 화상 연결로 진행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올해 코로나를 반드시 조기에 극복해 잃어버린 국민의 일상을 되찾겠다. 위기에 더욱 강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2021년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국정 과제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함께 ▲코로나19 종식 ▲불안한 민생 안정 ▲돌봄·교육 등 격차 해소 ▲주거 안정 등을 꼽았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관련 “미래 신산업과 벤처 기업 육성에 매진해 우리 경제의 미래경쟁력과 역동성을 더욱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최우선 국정 과제를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감염재생산 지수가 점차 낮아지는 등 코로나19 확산

세가 억제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도 “방심은 금물”이라며 “확실한 감소세가 이어지도록 방역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논란이 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공급 관련 지연 우려를 불식하고, 민심 다잡기에 나선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산 치료제 개발도 조건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등 가시권에 들어섰다.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대한민국은 방역, 백신, 치료제,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 될 수 있다”며 “빠른 ‘일상 회복’이 새해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안한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주(1월 11일)부터 3

차 재난지원금 지급 ▲복지 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정부는 이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이슈와 관련 “무엇보다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 하면서 임시직과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특히, 취업의 문이 더욱 좁아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최근 민심이 악화한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 또한 중차대한 민생 과제”라며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청해부대, 한국케미호 나포 해역 도착… 군사 대응 ‘난항’

‘혁명수비대’ 이란 최정예 부대 美 트럼프 이란제재 보복성 조치 국방부, 전면 군사작전 어려울 듯



4일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 국적의 한국케미호. /뉴시스

국방부는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 국적 유조선 ‘한국케미호’와 관련해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역 인근으로 이동시켰다고 5일 밝혔다.

청해부대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해적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상선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해부대 33진으로 임무 수행 중인 최영함은 전날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항 남쪽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한국케미호가 나포됐다는 상황을 접수하고 10여 시간 항해 끝에 5일 오전 5시쯤(한국 시간) 600여km 떨어진 호르무즈해역 인근 해역에 도착했다.

최영함은 청해부대 6진으로 첫 파병 임무를 수행했던 2011년 1월 21일에는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21명을 전원 구출한 ‘아덴만 여명작전’과 같은 해 4월 21일 ‘한진텐진호 선원 구출작전’을 성공리에 수행한 바 있다.

하지만, 청해부대가 그동안 작전을 펼쳐온 대상은 주로 해적과 같은 테러 집단이었고, 이들을 상대로한 구출작전이었던 점에서 이란의 정규군사조직인 이란 혁명수비대와 전면적인 군사작전을 펼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

여진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정규군과 별도로 1979년 이란혁명 이후 체제 수호를 위해 창설된 최정예 부대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12만 명에 이르는 육·해·공군 및 특수·정보부대 등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원개발부터 토목건설, 사치품 수입까지 이란 내에서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란 체제 수호의 선봉집단인 셈이다.

때문에 이번 한국케미호 피랍은 트럼프 정부의 대이란 경제제재와 지난해 1월 3일 미국에 의해 카심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피살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한국케미호 나포 관련해 이란 정부는 “페르시아-걸프 해역에서 한국 국적 유조선이 나포된 것은 환경 규제를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이란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제재 때문에 한국에 원유를 수출하고 받은 원화 대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불

만을 토로하면서 한국 정부에 동결 해제를 거듭 요구해왔다.

지난 2018년 5월 미국이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하고 대 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 은행들은 이란과 거래를 중단했고,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한국 내 계좌가 동결되면서 이란은 약 7조원 규모의 원유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란 정부는 최근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피격 사망 1주기를 맞아 미국에 대대적인 보복을 예고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한국 선박의 나포 소식이 알려지기 직전, 미국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란이 20% 우라늄 농축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란의 반관영 메르통신은 “몇분 전 포르도 농축시설에서 20% 농도 우라늄 농축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하루 전인 3일 주중이란대사관은 공식 웨이보 계정에 혁명수비대 사령관 카심 솔레이마니의 사진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영원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임무 수행에 돌입한 최영함은 바레인에 있는 연합해군 사령부를 비롯해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다.

/문형철 기자 captinm@